

평화와 통일을 위한 DMZ공동 유해 발굴에 관한 연구

박복원(캐나다크리스천컬리지 기독교상담학 겸임교수)

주경배(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과장 4급)

□ 6·25전쟁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발굴

가. 북한지역 전사자 유해발굴

DMZ와 북한지역에 대한 6·25전사자 유해발굴의 필요성은 사업초기인 2000년부터 제기되었다. 6·25전쟁 당시 발생한 쌍방 전사자의 유해송환과 관련된 내용은 ‘정전협정 규정 13항 부속¹⁾’과 부속문서인 ‘행정상 세목의 양해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54년 8월 제47차 군정위 본회의에서 양측은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에 관한 문서를 합의하여 1954년 9월에서 10월 말까지 유엔사 측은 1만3천 5백여 구의 공산측 시체(유해)를, 공산 측은 약 4천여 구의 시체를 상호 반환하였다²⁾.

이를 위해 기념사업단은 2001년 유해발굴 사업예산에 DMZ와 북한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시행하기 위해 비록 소규모지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비를 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의 유해발굴사업은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일부였기 때문에 북한과 협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조직과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과 유해발굴을 위한 협력은 희망사항에 그치고 말았다. 그 대신 향후를 위해 『6·25전쟁 국군유해소재증언집 : DMZ 및 북한지역』을 제작, 발간했다.

북한과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협력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처음으로 논의 되었다. 당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는 5개 분야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 그 중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군사적 상호협력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사항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이 군사적 신뢰조성 및 전쟁종식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은 이해를 같이 하고 추진대책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단 한 차례의 추가합의도 갖지 못했다.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전사자 공동 유해발굴 추진 의지를 천명했으나 뒤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북한의 핵실험 등이 이어지면서 유해발굴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력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집 및 유해소재 분석지도 발간, 매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향후

1) 매장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 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2) 국방일보, 2014. 7. 23, 11면 참조

북한지역에서 유해발굴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나. DMZ 및 북한지역 전사자 유해발굴

2000년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착수한 이후 최근까지 남한의 주요 격전지에서는 수차례 반복해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지역에서 대규모 발굴지역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반면 휴전 이후 사람의 왕래가 끊어지면서 원형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DMZ지역은 그야말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DMZ지역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6,500-13,000여 구, 미군 유해 2,000여 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DMZ지역의 유해발굴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DMZ지역은 미확인 지뢰 매설 지역이 다중 분포되어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북쪽의 DMZ 및 북한지역에 매장된 국군 및 유엔군 유해발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지역에서 공동 유해발굴은 미·북 협력사례와 함께 2007년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시 기본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호전된다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활용하되 남·북의 특수성과 관계 진전을 감안해 가면서 다양한 접근 및 추진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한에서 발굴된 후 경기도 파주에 조성된 북한군 / 중국군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유해의 신원확인 및 송환을 위한 공동노력도 제네바 협약의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측에 ‘6·25전쟁 시기 사망한 중국군 유해송환’을 전격 제의하면서 시작된 중국군 유해송환 업무가 9개월의 추진과정을 거쳐 2014년 3월 28일 한국 측 국방부 차관과 중국 측 민정부 국장 주관하에 인천공항에서 경건하고 의미 있는 인도식 행사를 하였다. 중국군 유해 송환은 우리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과거 적 대국이었던 중국에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437구의 대규모 유해’를 송환함으로써 한·중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³⁾.

최근 리비아의 실종자 유해발굴을 위한 협력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발굴된 북한군 및 중공군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공동노력과 함께 남한지역에서 북한 및 중국과 공동발굴 역시 정책적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상과 같이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동맹체제 발전과 함께 남·북은 물론 중국과 군사교류 증진에 이르기까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주변국과의 우호 증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

남·북 공동 유해발굴 추진의 역사는 최초 북측이 제 7차 장성급 군사회담(‘07.12.12 - 14) 시 유해공동발굴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남측 추진방안이 준비되면 넘겨달라고 요청하였고, 아울러 경비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추진하자는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하려면 과거에 먼저 실시하였던 미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발굴한 사례를 알아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미·북 공동 유해발굴을 시작한 시점은 1996년부터이며 이후 2005년까지 10년간 평북 운산 등 5개 지역에서 연 1-5회 발굴을 하였

3) 국방일보, 2014. 7. 23일자(11면), 6·25전쟁 시기 사망한 ‘중국군 유해송환’ 추진경과 및 성과

다. 1회 발굴 기간은 1개월 정도로 하였고 매년 3월-10월 어간에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0년간 총 229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봐서 연평균 23구의 유해를 발굴 하였다. 협상시기와 장소는 발굴 전인 11월 경 방콕에서 3일간 진행하였다. 발굴팀 구성은 미측 28명, 북측 1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측은 2개 팀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장소에서 발굴하도록 하였고, 북측은 미측 1개 팀당 50명씩 나뉘어서 발굴을 하고 이를 통제하는 인원이 20여명으로 구성되어 발굴을 실시하였다. 발굴 장소는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여서 통보하면 선발대에 의해서 공동 답사를 실시 후 발굴을 하였고, 주당 발굴 일수는 6일로 하고 일일 6시간 활동하면서 발굴을 하였다. 미측에서 부담한 경비는 1개월 기준으로 평균 120만 달러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사용처는 인건비·숙영지사용, 경계제공료, 유류, 발굴도구 일체, 기타 등으로 사용된 비용이다.

2005년 1차 발굴 종료 후 북핵 문제로 인해 공동발굴은 현재까지 중단상태이며, 2011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군의 유해발굴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앞두고 다시 중단되었으며 2013년 북측이 정전협정 60주년 행사 취재차 평양을 방문 중인 기자에게 북한이 미국 국방부와 공동으로 6·25전쟁에서 전사한 미군유해 발굴을 재개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 때문에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해온 유해발굴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까지 유해발굴은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당장은 북한과 공동으로 유해발굴을 진행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위에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를 경험 삼아 남·북 공동 유해발굴을 실시하는 조건하에 북한 지역에서 발굴가능지역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대량피해 발생지역과 북한의 조사시설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집단매장 예상 지역은 포로수용소 지역인 벽동, 강풍, 숙천, 수안 등으로 병사(病死)한 국군포로를 수용소 내 별도 장소에 집단 매장하였다는 증언을 토대로 발굴지역을 판단해야겠으며, 대부분 철수로 주변 야지에 2-3구 정도로 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략 6개소를 선정해 보았다.

<표 II -24> 북한지역 유해발굴 가능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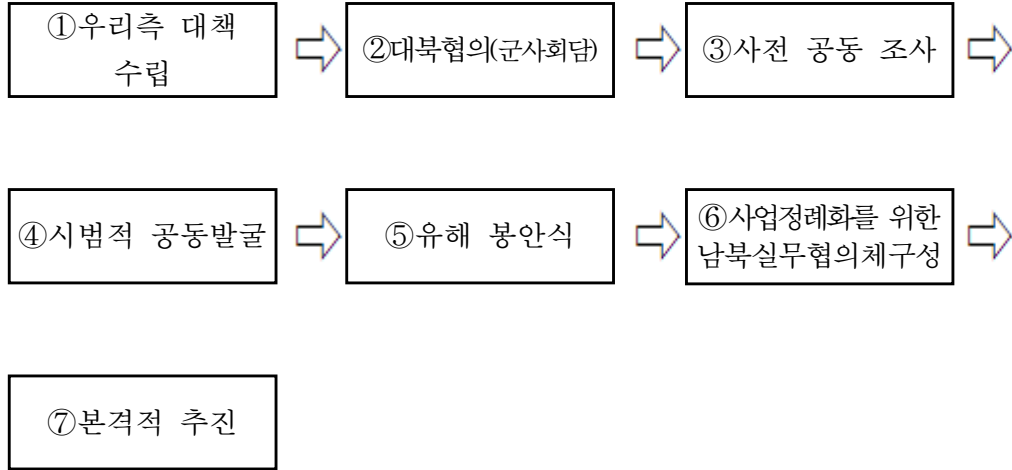
우선 순위	장 소	전투 부대	전사자 (추정)	기 타 고 려 요 소
1	희천-온정리	제6사단	1,500여명	묘향산 인근 일부 개방가능지역
2	영원	제8사단	900여명	
3	덕천	제7사단	800여명	
4	개천-비호산	제7사단	600여명	비행장 등 군사시설 위치
5	영변-운산	제1사단	500여명	원자로 시설 등 민감지역
6	박천-태천	제1사단	400여명	비행장 등 군사시설 위치

<그림 II-3> 발굴가능지역 요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 방안은 유해발굴 사업의 안정성 보장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먼저 공동발굴지역은 우선 DMZ지역에서 실시한 후, 북측지역, 남측지역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반드시 유관 부처(서)간에 긴밀한 공조체제하에 추진하고 노력을 통합하여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남북 공동유해 발굴 추진 절차는 우선 우리측 대책을 수립 후에 남북합의 및 조사회담을 실시하고 사전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시범적으로 공동발굴을 해 보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남북합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림 II-4> 남·북 공동 유해발굴 추진 방안



① 대북 협의 및 군사회담

먼저 우리측 추진대책을 수립 후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되 군사실무회담시 우리측 추진방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 검토안을 토대로 대북협의를 추진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회담의 형식과 시기 및 공개여부 등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② 사전공동조사

사전공동조사를 위해 상호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협의를 통한 발굴 후보지역을 국군 대량 피해 지역·포로수용소 설치장소 등 관심지역으로 2-3개소 정도로 선정하여 쌍방이 공동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굴지역을 발굴 1개월 전에 확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③ 시범적 공동발굴

먼저 시범적 공동발굴 시기는 기상조건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기간은 미국의 경우처럼 1개월 내외로 하되 2개 지역으로 분산하여 운용 토록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단 편성 규모는 남측은 25 - 30명⁴⁾으로 발굴요원과 감식, 지원, 지휘 및 통신 분야별로 편성하여 제한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측은 발굴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임무수행, 예산, 병력통제, 지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시 대략 100여명으로 하여 2개 지역에 각각 50여 명씩 지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발굴절차 및 방법으로 발굴시간은 주 5일, 일일 8시간(08:00-17:00)으로 하고 발굴시 기초굴토는 공동으로 하고 유해식별 시 정밀발굴은 남측 단독으로 하여 현재 발굴간 적용하고 있는 문화재 발굴기법을 적용하여 세밀하게 발굴하고, 감식은 발굴된 유해와 유품은 캠프 내에 감식소를 설치하여 남측이 관리하고 쌍방 전문가에 의해 인정된 국군유해와 유품은 발굴종료와 같이 반출하면 될 것으로 본다.

④ 유해봉안식

최초 봉안식은 국가의 무한책임 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정부차원의 행사로 성대하게 치루고 필요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노제를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봉안행사가 종료되면 신원확인에 필요한 DNA시료 채취를 위한 정밀감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현충원 내 국유단 감식소로 운구를 하여 유해보존시설에 안치하면서 지속적인 정밀감식과 신원확인 절차를 추진해 나가면 될 것

4) 발굴단 편성 : 25 - 30명(발굴 13 ~ 15명, 감식 2 ~ 3명, 지휘/통제 3 ~ 4명, 지원 7 ~ 8명)

으로 본다.

⑤ 사업 정례화를 위한 남북실무협의체 구성

쌍방은 매년 공동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는 쌍방 대령(대좌)급을 단장으로 하며 영관급의 실무자로 편성하되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면 되겠다. 협의체의 임무와 기능은 쌍방 전사자 관련 자료 및 조사결과를 교환하며, 남북공동협력을 위한 정기계획 협의를 매년 4~5회 발굴을 위해 실시하고, 다음년도 세부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본다. 회의는 매년 쌍방이 합의한 시기와 장소에서 개최하며 필요시 쌍방의 요구에 의해 수시로 개최하면 될 것으로 본다. 남·북 유해 공동발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 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추진대책과 합의서(안)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여건이 조성되면 대북협상전략을 수립하여 협의를 추진하되 북측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측 추진대책을 확정 후에 북측에 전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대북 협의 결과에 따라 공동조사 및 시범공동발굴사업 추진 준비를 하고 네 번째는 시범공동발굴 사업 이후, 유해발굴 사업 정례화를 위한 남북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본다.

박복원 교수의 <6·25전쟁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발굴>연구에 대한 논평

김지원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3:8)

최근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다. 6·25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국내·외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의 사망과 가족, 친지와 이별 등 다양한 상처를 남겼다. 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가 훨씬 지났지만 아직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아직도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그리움과 슬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거나 고령으로 인해 삶을 마감해 가고 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는 일은 이들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연구자가 언급하였듯이 전쟁의 당사자이며 희생자인 남북이 함께 2007년 전사자들의 유해발굴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후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계속 진행되지 못했지만 최근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논평자는 해부학과 재활치료를 전공하여 유해발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박복원 교수의 논문을 읽으며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제안 점을 나누고 이를 논평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휴전 이후 사람의 왕래가 끊어지면서 원형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DMZ지역은 그야말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며, DMZ지역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6,500-13,000여 구, 미군 유해 2,000여 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에 매장된 국군 및 유엔군 유해발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도주의적 차원과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해발굴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하지만 본 연구가 기독교학문연구로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유해발굴의 필요성과 근거를 언급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둘째, 연구자는 “최근 리비아의 실종자 유해발굴을 위한 협력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의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말한다. 신원확인 기술은 DNA 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해발굴의 어떠한 기술적 측면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연구자는 “유해발굴 사업의 안정성 보장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먼저 공동발굴지역은 우선 DMZ지역에서 실시한 후, 북측지역, 남측지역 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순서에 대하여 유해발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보다 쉬운 남측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시행하고 그 이후에 DMZ지역, 북측지역의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저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넷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활동했던 주경배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전사자의 신원

확인율은 발굴된 유해 대비 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해를 발굴한다 하더라도 1% 수준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상태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원확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해발굴에 대한 귀한 연구를 수행한 박복원 교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 박복원 교수의『6·25전쟁 전사자 남북 공동 유해발굴』연구를 토대로 남북한이 협력하여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유해발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본다.